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 전국 단위 지하 안전관리 본격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2025.12.23.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전국 단위 지하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하였다. 최근 도심지 굴착공사 확대와 노후 지하 시설 증가로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직권 현장조사 기능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데이터 기반 탐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관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던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질한 수준의 지하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 정보, 지질 정보 등 축적된 지하 안전 관련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함으로써 위험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고,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전국 연간 지반탐사 연장을 2024년 2,308km에서 2025년 8,060km, 2026년 1만 1,380km, 2027년 1만 4,000km, 2028년 1만 5,000km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데이터 분석 기반 지하안전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전문기관 위탁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지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Shutterstock